

트럼프즘 탄핵정국 금리인하... 2%대 저성장 직면

거시경제 전망

韓, 수출 증가폭 줄고 내수회복 더더 정치적 불확실성에 정책·입법 제동 FTA 등 국내외 현안 대응력 높여야

2025년 세계 경제의 중심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벼랑 끝 전술, 일관성 없는 행동,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즘'(트럼프주의)은 전세계의 질서와 안정을 크게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암초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탄핵정국으로 얼어붙은 내수(소비·투자) 경기에 수출 부진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얼마나 '수출 코리아'의 위상을 지켜낼 지가 올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요국, 금리 인하 가능성 ↑

새해 세계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며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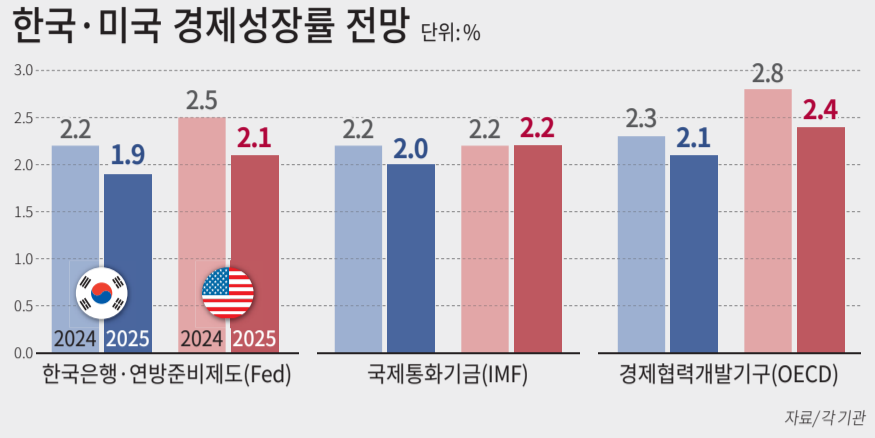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1.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물가는 지난해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 2%대로 떨어졌다.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만큼 올해는 2%대를 밑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로 2.0% ▲영국 2.1% ▲중국 1.7% ▲일본 2.0%로 예상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으면 중앙은행은 올렸던 금리를 내린다.

올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25~50bp(1bp=0.01%포인트)인하할 전망이다. 현재 4.25~4.5%인 기준금리를 연말에는 3.75~4.00%까지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매분기 25bp 금리를 인하해 올해 말 3.75%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 흔들리는 국제사회

다만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 정부가 오기 전 이야기다. 오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며 관세·이민정책을 시행하면 잠잠해진 물가와 고용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는 대선 당시 미국 국경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60%, 멕시코산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은 늘어난 관세 비용을 수입품에 전가한다. 미국의 경우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고, 그 외 국가들은 이에 보복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민정책으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으로 그 공석을 채워야 한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고용을 위한 불법이민자 추방이 물가상승을 이끌어 수출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리를 인하할 시기를 늦춰 경제 성장이 더뎠을 수 있다.

다행인 점은 트럼프가 내놓은 계획은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2017~2021년 대통령 재임 당시 의회가 비상사태 또는 국가안보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조치할 수 있도록 위임한 광범위한 권한(행정명령)을 활용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단독 관세 법안도 불가능하다. 공화당은 의회에서 매우 근소한 차이로 우위에 있지만 의원들 중에는 반무역의 제를 지지하지 않는 의원이 많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공약한 관세수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제이피모건체이스(JPM)는 각 국가에 10~20% 부과하는 보편관세는 시행하기 어렵고, 중국관세가 현 수준(약 11%)에서 50%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MS)는 중국 관세가 25% 증가하고, 이외국가는 2~3%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불법이민자로 추정되는 약 830만명 또한 한 번에 추방하면 경제 충격이 커

질 수 있으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 韓, 풍랑 대비해야

우리나라도 앞으로 나타날 풍랑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증가폭이 줄어들고, 내수 회복이 더딘 상태다. 트럼프 정책이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성장을 위해선 내수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이 안 좋은 내수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추경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빠른 속도로 합의하는 것이 내수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정치 프로세스가 앞으로 몇 개월 가는 동안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국민들도 마음을 놓고, 해외에서도 우리를 보는 믿음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경과 같

은) 중요한 정책을 빠른 속도로 합의하는 등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보편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시 우선순위를 정해 지킬 것은 지키는 전략도 필요하다.

주요 협상 분야로는 자동차와 농축산품이 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생산력이 크지 않아 관세를 올려도 우리나라에서 구매해야 하지만, 자동차는 미국도 생산력이 있어 관세 인상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타격을 볼 수 있다.

FTA 재협상 시 미국이 자국 물건 구매를 요구할 경우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분야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농산물 시장의 경우 이상기온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 시장개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FTA 협상 카드로 농산물 분야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중장기 대안 나오나... 불확실성 해소 기대

》》1면 '소비축진·추경 시급'서 계속

1분기 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에는 여객기 참극에 따른 우선 지원과, 계엄령 여파로 소비자 발길이 끊긴 중소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주거용 대출 등으로 원금·이자 갚느라 지갑을 닫는 것이다. 추경이 우선 필요하지만 올 한 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갈 중장기적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외환위기 재발 위험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

왔다. KDI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경고가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환율은 비정상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 혼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금의 해외 유출 우려가 상존한다. 또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을 거듭했다. 탄핵소추 심리 및 내란혐의 수사의 진전 여부와 별도로, 자본시장 정상화의 단초는 금융당국의 의지와 추진력에 달려 있다. 환율·주식 추이는 연초부터 조미의 관심사가 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 < 해저 전력케이블 >